

전장에서 시장으로 : 중국-동남아 관계의 지속과 변화*

박사명**

I. 문제의 제기

동남아에서 1980년대까지는 일본 중심적 ‘대동아공영권’의 유령이 배회하는 반면, 1990년부터는 중국 중심적 ‘대중화경제권’의 위협이 고조된다. 따라서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동남아-동북아 관계의 변화를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의 전환이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위상은 한반도와 유사하게 ‘중국후원(後援)’ 또는 ‘순치관계’로 설정된다. 지정학적으로 동남아 각국 경제구조의 중추를 형성하는 화교경제는 동남아에 대한 일본의 ‘외재적’ 위상과 대조적인 중국의 ‘내재적’ 위상을 반영한다. 그 점에 있어서 동남아와 중국의 상호관계는 동남아의 국지적 지역질서는 물론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광역적 지역질서에 대해서도 심대한 함의를 시사하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 전역이 냉전시대의 상호갈등적 ‘전장’

* 이 논문은 2001년도 강원대학교 기성회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smpark@kangwon.ac.kr

에서 냉전종식 이후 상호의존적 ‘시장’으로 전환되는 양태와 동인을 구명함으로써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한 객관적 전망을 탐색할 것이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중국과 주변국가의 영합적(zero-sum) 상호갈등을 경계하는 ‘중국위협론’과 정합적(positive-sum) 상호의존을 기대하는 ‘중국기회론’이 엇갈리는 지극히 유동적인 국면에서 동남아 10개국은 중국의 파격적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2002년 중국-ASEAN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다(Roy 1996; Whiting 1997; Yee and Storey 2002). 그와 같이 획기적인 사태의 진전은 중국의 단기적인 전술적 변화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선택을 반영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동남아의 적극적 대응은 미시적 의제설정에 대한 반사적 대응에 불과한 것인가, 거시적 지역질서에 대한 주체적 구상을 함축하는 것인가? 그와 같이 전례 없는 지역적 동향이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새로운 지역질서의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하여 제시하는 전망은 무엇인가? 그러한 핵심적 문제들에 대한 해명에 있어서 중국-동남아 관계에 내재하는 계속성과 가변성의 양면성에 대한 역동적 분석이 요구된다.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에 집중하는 중국 중심적 편향이 아니면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전략적 대응에 집중하는 동남아 중심적 편향이 심각하다. 중국과 동남아의 지극히 비대칭적인 세력균형을 고려할 경우 전자는 일반적으로 중심부적 시각이 두드러지며, 후자는 전반적으로 주변부적 시각이 두드러진다. 전자의 경우 중국의 ‘주동적 선택’을 중심으로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를 조명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그에 대한 동남아의 ‘피동적 대응’을 중심으로 중국-동남아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중국이나 동남아의 어느 일방을 부각하는 점에서 지나치게 일면적이고 정태적이

다. 그러나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작용에 동원되는 정치적 및 경제적 자원의 배분구조가 정태적으로 고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국과 동남아 각국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대한 포괄적 조명이 필요하다.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는 중국 및 동남아 각국의 국내적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조건 및 세계적 조건의 변화를 반영한다. 기존의 연구는 그와 같은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요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중층적 접근이 아니라 어느 한 차원의 요인만을 부각하는 단선적 접근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세계적 차원의 권력배분에 주목하는 현실주의(realism) 시각과 국가적 차원의 이익배분에 주목하는 자유주의(liberalism) 시각은 모두 물질주의적 편향이 심각하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관념적 측면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에서는 국가적 정체성(identity) 및 이익(interest)의 변화가 국제적 차원의 구조적 조건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국제관계를 구성, 해체, 재구성하는 역사적 과정(process)이 부각된다. 따라서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의 관념적 요인과 물질적 요인에 대한 중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2차대전 이후 대외적 민족해방과 대내적 사회혁명의 전개과정에서 중국과 동남아는 각각 밖으로부터 냉전체제의 고착, 이완, 해체 등 세계적 차원의 조건과 안으로부터 정치체제의 형성, 균열, 전환 등 국가적 차원의 조건이 지역적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를 구성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는 현실적으로 강권적 일방주의(unilateralism)에서 외교적 양자주의(bilateralism)를 거쳐 제도적 다자주의(multilateralism)까지 급속하게 변화하는바, 그와 같이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중첩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중국-동남아 관계의 계속성과 가변성을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방주의적 패권주의, 양자주의적 주권주의, 다자주의적 지역주의 등 중국-동남아 관계에서 드

러나는 다양한 양상을 체계적으로 구명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에 대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접근시각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를 서부유럽의 지역주의와 대조하는 양분법적 시각이 흥미한다. 첫째, 전략문화의 사회화에 있어서 서부유럽의 상호의존적 ‘로크(Locke)문화’ 및 ‘칸트(Kant)문화’와 대비되는 동아시아의 상호갈등적 ‘홉스(Hobbes)문화’가 부각된다(Wendt 1999: 246-312). 둘째, 국제관계의 제도화에 있어서 ‘동질적’ 서부유럽의 ‘경성적’ 제도와 대조되는 ‘이질적’ 동아시아의 ‘연성적’ 관행이 강조되는바, 동아시아의 경우 동남아의 수평적인 다자주의적 관행과 동북아의 수직적인 일방주의적 관행 및 양자주의적 관행이 부각된다. 셋째, 주도역량의 조직화에 있어서 국가 주도적인 정부 간 다자주의와 시장 주도적인 기업 간 네트워크가 강조된다(Katzenstein 1997; Katzenstein et al. 2000). 넷째, 지역질서의 안정화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다자제도와 현실주의적 세력균형이 대비된다(Ruggie 1993).¹⁾ 그와 같은 특정의 이론적 시각은 특정의 실천적 전략을 통하여 특정의 현실을 초래한다. 각종 이론이 각종 현실을 구성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태적이고 일면적인 이론은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현실에 대한 적실성을 상실한다. 냉전종식 이후 급속하게 전개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각종 이론이 구성하는 정태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역동적 변화를 과시한다. 그 점에 있어서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주

1) 그에 관한 전형적 표현에 의하면, “유럽에는 전통적 세력균형의 정치가 극복될 가능성이 잠재하는 반면, 아태지역의 경우에는 아직 적절하게 안정적인 세력균형이 최선의 희망이다”(Ruggie 1993: 4).

의의 동향과 전망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내포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지역질서의 가능성은 ‘계속혁명’과 ‘혁명수출’을 추구하는 혁명적 일방주의에서 ‘경제발전’과 ‘주변안정’을 모색하는 외교적 양자주의를 거쳐 ‘상호의존’과 ‘지역통합’을 지향하는 제도적 다자주의까지 나아가는 역사적 진전에서 그 단초가 발견된다. 일방주의적 ‘홉스문화’의 폐허에서 양자주의적 ‘로크 문화’가 부상하고, 동시에 다자주의적 ‘칸트문화’가 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문화변동이 새로운 다자주의적 지역질서의 제도화에 기여할 가능성 여부는 이제 강자와 약자를 막론하고 다양한 주체의 규범적 지향과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다.

2차대전 이후 민족해방의 ‘베트남 전장’에서 지역패권의 ‘캄보디아 회랑’을 거쳐 자유무역의 ‘AFTA 시장’으로 진전하는 동남아의 정치변동을 통하여 동남아와 중국의 관계가 재편되는 역사적 국면에서 ‘중국위협론’과 ‘중국기회론’이 부침한다. ‘중국위협론’은 정치적 상호갈등의 과거를 기억하는 현실주의(realism) 시각을 대변하고, ‘중국기회론’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미래를 기획하는 자유주의(liberalism) 시각을 대변한다(秦亞青·米尔斯海默 2003; Brzezinski and Mearsheimer 2005; Nye 2005). 그러나 ‘기억’과 ‘기획’이 충돌하는 역동적 전환시대에 기존의 현실은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신화’로 해체되고, 새로운 실천을 통하여 새로운 ‘현실’로 구성된다. 결국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 구성, 해체, 재구성을 거듭하는 관념적 현실이 존재할 뿐이며, 물질적 현실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관념적 인식이 문제이다(Oksenberg and Economy 1999). 따라서 현실주의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시각이 공유하는 물질적 합리주의는 보다 관념적인 구성주의(constructivism) 시각에 유기적으로 포섭되어야 하는 것이다(王正毅 2003).

그러나 기존의 국내외 연구동향은 전반적으로 심각한 편향성을 드러낸다. 첫째, 중국-동남아 관계의 형성과 변화를 주도하는 행위주체로서 언제나 중국을 설정하는 대국 중심적 편향이 심각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대국(강자)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이론적 편향은 소국(약자)의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를 초래하는바, 예컨대 제국주의에 대한 동남아 각국의 성공적 투쟁이나 미국 및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효과적 항쟁을 외면한다. 둘째, 중국-동남아 관계의 공간적 조건으로서 세계적 차원의 세력구조에만 주목하는 거시적 편향이 심각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세계적 차원에만 주목하는 편향적 시각은 국가적 차원의 동인에 대한 과소평가로 귀결되는바, 예컨대 중국의 정치변동이 중국-동남아 관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간과한다. 셋째, 중국-동남아 관계의 시간적 조건으로서 과거의 기억에만 집착하는 정태적 편향이 심각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과거의 경험을 과대평가하는 편향적 시각은 미래의 변화에 대한 과소평가를 수반하는바, 중국과 동남아의 자유무역지대 기획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 점에 있어서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는 그 주체적 조건에 있어서 강자의 패권성과 약자의 정체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포괄적 접근을 요구하고, 그 공간적 조건에 있어서 세계적 차원의 권력구조와 국가적 차원의 정치변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층적 접근을 요구하며, 그 시간적 조건에 있어서 냉전시대 '전장'의 이원적 권력구조와 냉전 이후 '시장'의 다원적 경제변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역동적 접근을 요구한다.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갈등적 세력균형을 부각하는 현실주의적 시각과 상호의존적 이익균형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은 새로운 제도형성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구성주의적 시각에 유기적으로 포섭될 수 있다. 현실주의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시각은 물질적 조건을 강조하는 반면, 구성주의적 시각은 물질

적 조건과 관념적 조건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현실주의적 세력균형과 자유주의적 이익균형이 구성주의적 질서형성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강자의 무기’는 일반적으로 물질적 세력구조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적 담론인 반면, ‘약자의 무기’는 필연적으로 관념적 전략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담론이다(Alagappa 2003). 국제관계의 ‘무정부성(anarchy)’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는 ‘홉스문화’, 외교적 협상에 의존하는 ‘로크문화’, 제도적 규범에 의존하는 ‘칸트문화’ 등 크게 세 유형의 국제질서가 가능하다. 각 전략문화의 사회화 수준은 강권에 따른 타율적 순응, 이익에 따른 도구적 순응, 가치에 따른 자율적 순응 등으로 다양하며, 모든 유형의 전략문화는 그 국제적 사회화가 초래하는 정태적 계속성과 동시에 그 주체(agency)의 정체성(identity)과 이익(interest)의 변화가 수반하는 역동적 가변성을 내포한다. 거시적 구조는 미시적 주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그 잠재적 효과가 현재화된다(Wendt 1999: 12). 그와 같은 구조와 주체의 상호작용은 현상유지와 질서순응을 넘어 현상타파와 질서형성을 위한 주체의 역할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계속혁명’의 강권적 일방주의에서 ‘경제발전’의 외교적 양자주의를 거쳐 ‘상호의존’의 제도적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지역협력의 진전이 새로운 지역질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남아의 경우에도 ‘냉전의 전장’에서 ‘주권의 평화’를 거쳐 ‘발전의 시장’을 지향하는 지역통합의 진전이 새로운 지역질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부유럽의 공식적, 제도적, ‘경성적(hard)’ 지역주의와 대조되는 동아시아의 비공식적, 비제도적, ‘연성적(soft)’ 지역주의도 이제 새로운 제도화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Katzenstein 1997). 동아시아의 전략문화에 있어서도 패권체제의 일방주의적 ‘홉스문화’와 주권체제의 양자주의적 ‘로크문화’가 중첩하는 현실에서 공존공영의 다자주의적 ‘칸트문화’가 태동하고 있다. 국제관계에 있

〈표 1〉 전략문화와 국제제도

전략문화	주체	기본가치	중심이익	체계	경로	무력수단	국제제도
홉스문화	적대	공존부정	상대이익	위협	강권	최대동원	일방주의
로크문화	경쟁	주권존중	절대이익	교환	외교	최소제한	양자주의
칸트문화	연대	공존공영	공동이익	통합	제도	전면배제	다자주의

자료: Ruggie 1993; Wendt 1999; 秦亞青 2003.

어서 ‘홉스문화’, ‘로크문화’, ‘칸트문화’ 등 문화적 다양성은 일방주의, 양자주의, 다자주의 등 제도적 다양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표 1〉). 서부 유럽은 ‘홉스문화’를 탈피하여 ‘로크문화’의 정착을 기반으로 ‘칸트문화’에 접근하는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홉스문화’의 약화, ‘로크문화’의 강화, ‘칸트문화’의 부상 등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2차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동남아는 외세개입, 이념대립, 종족갈등이 풍미하는 아시아의 ‘발칸반도’, ‘반란지대’, ‘도미노(domino)’ 등 홉스적 ‘자연상태’를 방불하는 지정학적 현실에 직면하며, 현실주의적 ‘패권안정’ 이외의 대안적 지역질서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면 외교적 양자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조건이 조성되는바, 냉전체제 변화는 세계적 차원의 구조적 조건이며, 수출지향 전략은 국가적 차원의 주체적 조건이다. 마르크스(Marx)의 고전적 명제와 같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자신이 선택하는 임의적 조건이 아니라 과거가 전수하는 일정한 조건 속에서 역사를 창조한다. 이 연구는 물질적 구조의 계속성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시각과 그 가변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시각을 구조적 조건에 대응하는 주체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 시각에 포섭함으로써 구조적 조건과 주체적 선택이 지역적 차원에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가 변화하는 양태와 동인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Ⅲ. 전장의 일방주의

국제제도의 일종으로서 일방주의는 국가주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형식적 일방주의와 형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부정하는 실질적 일방주의로 분류된다. 형식적 일방주의의 전형적 사례는 제국주의 식민체제이며, 실질적 일방주의의 전형적 사례는 패권주의 종속구조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적 조건 이외에도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의 경우에는 일방주의적 대외행태가 부각된다.²⁾ 2차대전 이후 식민체제의 붕괴와 주권국가의 부상에 따라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는 그 정치형의 심층적 지각변동을 경험한다. 그러나 식민체제의 일방주의를 대체하여 등장하는 주권체제가 요구하는 외교적 양자주의의 지역적 사회화가 지연됨에 따라 동아시아는 형식적 양자주의를 표방하는 실질적 일방주의의 풍미에 직면한다. 그러한 현상은 식민체제의 와해 직후 새로운 국가형성 초기단계라는 역사적 조건,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강화되는 민족주의라는 이념적 조건, 새로운 냉전체제의 구조적 역학에 따라 분화되는 급진적 민족주의와 보수적 민족주의의 대립이라는 정치적 조건이 작용한 복합적 결과이다(Alagappa 2003).

그 대표적 사례는 중국이 1954년 미얀마 및 인도와 합의하고, 1955년 반둥(Bandung) 회의를 통하여 국제적 승인을 확보하는 영토주권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 등 이른바 ‘평화공존 5원칙’이다. 2차대전 이후 식민체제의 해체에 따른 형식적 주권원칙의 지속적 천명에도 불구하고 1963년 중국-인도 국경전쟁, 1967년 중국-버마 외교중단, 1960년대 동남아 각국 혁명투쟁 지원, 1979년 베트남 무력침공 등 근본적 차원에서 실질적 일방주의가 관철되는 것이다. 식민체제를 국민국가로

2) 미국의 과거 ‘몬로주의(Monroe Doctrine)’는 강자의 실질적 일방주의인 반면, 미얀마의 과거 ‘버마식 사회주의’는 약자의 실질적 일방주의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전환하기 위한 투쟁에서 서구적 주권원칙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식민체제의 역사적 유산으로 인하여 주권 국가의 영토경계가 모호하고 국민통합이 부진한 현실에서 주권원칙을 유린하는 일방주의적 관행이 풍미하는 것이다. 식민체제의 해체에 따른 형식적 국민국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국가형성의 부진에 따라 양자주의의 지역적 사회화가 지연되는바, 끊임없는 대내적 종족분쟁과 계급갈등, 대외적 국경분쟁과 이념갈등은 그 전형적 반증이다. 요컨대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국제관계의 급진적 현상타파를 추구하는 중국의 ‘평화공존 5원칙’은 보편적 규범이 아니라 선택적 전략에 불과하다.

1. 중국의 일방주의

1949년 혁명 이후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양극적 냉전체제는 장기적으로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의 다자주의적 국제제도로부터 중국의 타율적 배제와 동시에 자율적 고립을 초래한다. 따라서 ‘수천 년 천하중원’의 자존의식과 ‘백여 년 서세동점西勢東漸’의 피해의식이 교차하는 분열적 정체성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통합적 정체성은 제국주의에 도전하는 사회주의에서 모색된다(毛澤東 1949). 아편전쟁(1840~42) 이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타율적 편입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자율적 이탈이 가속된다. 그와 같은 중국의 객관적 위상과 주체적 지향의 특수성은 양자주의적 외교와 다자주의적 제도를 경시하는 일방주의적 시각을 강화한다. 1950년대 친소반미의 ‘일변도一邊倒’, 1960년대 반소반미의 ‘양조선兩條線’, 1970년대 반소친미의 ‘일조선一條線’, 1980년대 ‘독립자주’ 등 모든 외교노선은 지도부의 관념적 변화를 반영하는바, ‘종합국력’과 국가이익이 중국 외교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다(張小明 1998).

공산혁명 이후 중국의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은 혁명 직전 마오쩌둥(毛澤東 1991: 1472-1473)의 ‘인민민주독재’ 선언을 통하여 분명하게 예고된다. “순중산(孫中山)의 40년 경험과 공산당의 28년 경험은 중국인민에게 제국주의 일변도가 아니라 사회주의 일변도를 요구한다. 기회주의는 불가능하며, 제3경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1949년 소련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은 동아시아의 ‘혁명적 정세’를 확인하고, 각각 ‘세계혁명’의 본부와 ‘동방혁명’의 지부로서 ‘혁명분업’에 합의한다(馬晉強 2000: 54-55; Chen 2001: 44-48). 1960년대 후반 문화혁명에서 가장 고조되는 중국의 혁명적 정체성은 대내적 ‘계속혁명’과 대외적 ‘세계혁명’에 대한 마오쩌둥의 급진주의적 성향에 기인한다. 그러한 시각에 있어서 정치체제는 공산당 일당체제로 정착되고 경제체제는 전면적 계획경제로 귀착되는바, ‘계속혁명’을 위한 문화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한 반소반미는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다. 그에 따라 중국의 혁명적 정체성은 ‘농촌’(제3세계)에서 ‘도시’(제국주의)를 포위하는 ‘세계혁명’의 일환으로서 동남아의 지역혁명을 지원하는 ‘혁명후방’으로 규정된다(Chen 2001: 207-212).

그와 같은 ‘혁명국가’의 정체성은 핵심적 국가이익인 국가안보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에 있어서도 ‘방어적 현실주의’보다는 ‘공격적 현실주의’를 강화한다(Chen 2001: 6-10; Mearsheimer 2001: 17-22).³⁾ 1950년대 한국전쟁 및 1960년대 베트남전쟁 참전결정이 모두 중국 국가안보에 대한 미국 제국주의의 위협으로 합리화된다(章百家 2005).⁴⁾ 혁명투쟁에서 내면화

3) 국제관계의 ‘무정부성’에 대응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력’을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인식하는 ‘방어적 현실주의’는 세력균형의 현상유지를 추구하지만, ‘생존을 위한 최대한의 권력’을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파악하는 ‘공격적 현실주의’는 세력균형의 현상타파를 추구한다(Mearsheimer 2001: 17-22).

4)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38도선 이북에 대한 미군의 진격을 계기로 결정되고, 베트남전쟁 참전은 17도선 이북에 대한 미군의 공습을 계기로 결정되는데, 중국영토에 인접한 한반도 및 베트남의 북부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바로 중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명

되는 ‘흡스문화’가 국가건설에서도 일방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다. 사실 냉전체제의 ‘진영정치’에 따라 적대진영에 대한 일방주의와 연대진영에 대한 양자주의로 분화되는 중국의 이중노선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의 인식에 있어서 진영경계를 초월하는 민족주의적 편향이 심화된다. 따라서 주권원칙에 대한 내면화의 지연에 따라 국가이익을 빙자하는 실질적 일방주의 가능성이 상존하는바, 1960년대 소련과의 분쟁과 1970년대 베트남과의 분쟁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더욱이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과정에서 전통적 조공체제 대신 근대적 주권체제를 수용하고, 1954년 미얀마 및 인도와 ‘평화공존 5원칙’에 합의함에도 불구하고 1960년 인도와의 전쟁 및 1967년 미얀마와의 단교가 발생한다.

2. 동남아 일방주의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탈식민화를 가속하는 동남아 각국의 민족주의는 주권원칙에 기초하는 국민국가의 건설에 있어서 식민시대의 구조적 유산으로서 종족적 ‘다중사회(plural society)’와 경제적 ‘이중사회(dual society)’를 통합적 국민국가와 자립적 국민경제로 전환하는 역사적 과제에 직면한다. 따라서 새로운 국민국가의 정체성은 ‘발견’ 아닌 ‘발명’의 대상으로서, ‘상상적 민족공동체’의 현실주의적 과제가 ‘상상적 지역공동체’의 이상주의적 과제를 우선하게 된다. 그러나 동남아의 지역적 정체성을 더욱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은 민족주의 자체보다 냉전체제의 구조적 원심력에 따라 급진적 민족주의와 보수적 민족주의로 양분되는 양극적 정치지형이다. 전자는 미국의 보수적 제국주의를 경계하고, 후자는 중

국의 급진적 패권주의를 경계한다(Acharya 2000: 49). 그와 같은 위계적 일방주의에 대한 도전은 동남아 민족주의의 ‘반사적’ 일방주의를 강화한다.

정치적으로 종족적 ‘다중구조’를 국민적 통합구조로 재편하기 위하여 국민통합이 국가이익으로 설정되고, 그를 위한 효과적 전략으로서 ‘다중구조’의 종족적 원심력을 조장할 가능성이 다분한 권력의 분산보다는 국민적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한 권력의 집중을 추구한다. 독립 초기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실험이 ‘다중사회’의 종족갈등이나 ‘이중사회’의 계급갈등으로 인하여 ‘연성국가(soft state)’의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급진적 민족주의와 보수적 민족주의가 모두 국가권력의 수직적 위계구조를 강화하게 된다(Acharya 2000: 59-63). 전자는 ‘인민민주주의’로 정당화되는 전체주의적 정치체제를 추구하고, 후자는 ‘민족민주주의’로 합리화되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지향한다. 그러나 양극적 냉전체제의 고착에 따라 그러한 민족주의는 모두 국가안보를 최우선적 국가이익으로 설정하는 ‘안보국가(security state)’의 정체성을 강화한다(Chai-Anan 1991). 1970년대에 이르면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의 군사정권,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문민정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공산정권 등이 모두 그러한 ‘안보국가’의 정체성을 공유한다.

경제적으로 일차산품 수출과 공업제품 수입에 의존하는 종속적 식민 경제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경제발전이 국가이익으로 설정되고, 수입대체 공업화가 기본전략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급진적 민족주의는 자립적 산업화를 추구하는 반면, 보수적 민족주의는 의존적 산업화를 추구한다(Acharya 2000: 51-54). 자립적이든 의존적이든 민족주의적 전략은 모두 국가주의적 경향을 공유한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는 모두 수입대체의 심각한 한계에 봉착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패권주의적 냉전체제는 민족주의적 주권체제의 제도화를 저해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 사이 공식

적 외교관계가 지연됨으로써 형식적 양자주의마저 배제되거나, 공식수교의 경우에도 실질적 상호협력이 부진함으로써 동남아 역내 국제관계가 전반적으로 형식적 양자주의에 정체되는 상황이 1980년대 중반 냉전체제 해체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동남아 역내의 국제관계에서 실질적 일방주의가 풍미하는 것이다.

3. 중국-동남아관계

중국혁명 이후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동남아의 중국에 대한 관계는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에 따라 대조적으로 전개되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양자주의적 외교관계, 후자의 경우에는 일방주의적 적대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경우 베트남과 미얀마를 제외한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1975년 공산화 이전에는 공식적 외교관계와 무관하게 실질적 일방주의가 관철된다. 중국-베트남 관계의 악화에 따라 급속하게 확산되는 실질적 일방주의는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서 절정에 도달한다. 공식적 외교관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미얀마와 베트남의 경우에도 1967년 미얀마 단교와 1979년 베트남 침공은 형식적 양자주의에 은폐된 실질적 일방주의를 폭로한다. 자본주의권의 경우 공식적 외교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인도네시아도 1967년 이후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은 베트남전쟁의 종결에 따라 1974년 및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1990년 이후에야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1978년 개혁개방 이전 중국과 동남아 각국의 상호관계는 형식적 양자주의가 선택적으로 적용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실질적 일방주의가 관철되는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 사이의 그와 같은 실질적 일방주의는 이념대립이 고조되는 세계의 구조적

〈표 2〉 2차대전 이후 공산주의 혁명운동

국가	공산주의혁명운동	투쟁시기
미얀마	버마공산당	1948-89
베트남 북	베트남노동당	1945-75
남	민족해방전선	1958-75
캄보디아	캄보디아공산당	1960-75
라오스	라오스인민혁명당	1951-7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공산당	1945-65
필리핀	필리핀공산당	1968-
말레이시아	말라야공산당	1948-89
싱가포르	말라야공산당	1948-65
태국	태국공산당	1945-85

자료: Van der Kroef 1980; Roy 1998; Acharya 2000.

조건과 국가형성이 개시되는 각국의 역사적 조건이 동아시아의 지역적 환경에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국제적 혁명세력과 반동세력의 전장’으로서 동남아의 지정학적 위상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에서 이념적, 정치적, 군사적 ‘상위정치’의 갈등이 증폭되는 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하위정치’의 협력은 배제된다(〈표 2〉). 그와 같은 중국과 동남아의 일방주의적 관계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민족해방’ 투쟁에 대한 국가차원의 직접지원과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인민해방’ 투쟁에 대한 정당차원-‘인민외교’-의 간접지원으로 표현된다(Van Ness 1970: 1-10; Roy 1998: 176-177; Chen 2001: 207-229). 그와 대조적으로 중국에 대한 동남아의 일방주의적 대응은 사회주의권은 외교관계의 중단, 자본주의권은 외교관계의 지연으로 나타난다.

동남아 각국 공산당은 그 중심적 지지기반이 화교사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친중노선에 주도됨으로써 중국의 혁명적 일방주의와 동남아의 반사적 일방주의에 모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Van der Kroef 1980: 217-51). 베트남의 ‘혁명후방’이자 동남아의 ‘혁명기지’로서 중국은 혁명의 주체인 동남아의 국가나 정당에 대해서는 양자주의적 연대관계를 건

지함으로써 주권원칙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며, 혁명의 객체인 국가나 정당에 대해서는 일방주의적 적대관계를 고수함으로써 주권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따라서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에서 양자주의는 보편주의적 제도가 아니라 특수주의적 전략에 불과하다. 베트남의 경우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방공, 공병, 수송, 병참 등 연인원 32만 이상—최고 1967년 17만—의 병력을 파견하고, 1950년부터 1978년까지 총 200억 달러 이상의 물자를 제공한다. 거기에는 육군, 해군, 공군 등 200만 이상 병력의 무장이 가능한 무기와 탄약 등 군수물자가 포함된다(Chen 2001: 221-229; 唐希中外 2003: 242).

IV. 양자주의의 전환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일방주의에 따라 주권원칙이 유린되는 형식적 양자주의가 주권원칙이 존중되는 실질적 양자주의로 전환하는 역사적 계기는 1980년대 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 해체와 지역적 차원의 캄보디아 종전이다.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 ASEAN 각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전면적으로 전환되는바, 각국 공산당의 무장투쟁에 대한 혁명적 지원은 중단되는 반면 베트남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ASEAN 각국에 대한 전략적 연합이 추진된다. 개혁개방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중국의 정체성과 이익이 ‘주관적 정치의지’를 강조하는 마오쩌둥의 ‘계속혁명’에서 ‘객관적 경제법칙’을 강조하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경제발전’으로 전환되고, 중국의 지역적 위상은 ‘혁명후방’에서 ‘성장동력’으로 전환된다. 그에 따라 1950년대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수교, 단교, 복교가 거듭되는 동남아 각국과 중국의 상호관계가 1990년대 초반에 이르면 전면적으로 정상화된다. 중국혁명 이후 공식수교 여부와

무관하게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강권적 일방주의가 외교적 양자주의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동남아 각국과 중국의 상호관계와 동남아 역내의 상호관계에서 확산되는 새로운 양자주의는 종전의 양자주의와 지극히 대조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첫째, 종전의 양자주의는 형식적 외교관계에 안주하는 반면, 새로운 양자주의는 실질적 상호협력의 확대와 심화를 추구한다.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 이후에도 실질적 상호협력이 부진하던 냉전시대와는 대조적으로 상호협력의 외연적 범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그 내포적 수준이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 차원으로 심화되는 것이다. 둘째, 종전의 양자주의는 지역적 다자주의에 대하여 지극히 부정적인 ‘소극적 양자주의’인 반면, 새로운 양자주의는 지역적 다자주의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적극적 양자주의’이다. 개별적 양자주의가 집단적 다자주의의 발전을 제동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다자주의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디딤돌’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1. 중국의 양자주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체성은 마오쩌둥의 ‘계속혁명’이 표상하는 혁명적 정체성에서 덩샤오핑의 ‘경제발전’이 대변하는 실용적 정체성으로 전환되고, 1991년 소련의 해체에서 절정에 도달하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화된다. 정치개혁에 따라 ‘혁명국가’의 전체주의적 정치체제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 이행하고(Deng 2000: 50-51), 경제개혁에 따라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거쳐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귀착한다. 그와 같은 정치변동과 경제변동에 따라 대외적으로 국제질서의 전면적 현상타파를 추구하는 종전의 급진적 정체성은 여전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국제정치질서와 신국제경제질서'를 표방하면서도 국제질서의 현상유지에 타협하는 보수적 정체성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체성은 “상호의존과 세계화가 심화되는 세계에서 고루한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국가주권 개념과 진부한 국가이익 정의”에 대한 강력한 집착을 드러낸다(Deng 1999: 47).

‘전쟁과 혁명의 시대’가 ‘평화와 발전의 시대’로 이행한다는 국제정세에 대한 새로운 평가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경제발전이 핵심적 국가이익-‘1개 중심’-으로 설정되고, 그를 위한 필수적 전략수단으로서 개혁개방 및 정치안정-‘2개 기본’-이 강조된다(鄧小平 1993: 248-250). 그와 같은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은 국제관계에 대한 중국의 철저한 현실주의적 시각을 반영한다(Deng 1999: 52-53).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추세는 ‘다극화’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은 한 ‘극’이라는 덩샤오핑(鄧小平 1993: 353-356)의 시각은 국제정치의 특징을 ‘강권정치(realpolitik)’로 파악하는 중국적 현실주의를 대변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혁명국가’의 ‘공격적 현실주의’보다는 ‘발전국가’의 ‘방어적 현실주의’를 지향한다(Mearsheimer 2001: 17-22). 국제관계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역량을 포괄하는 ‘종합국력’을 추구하는 영합적 경쟁으로 이해되며, 국제주의적 상호의존도 민족주의적 국가이익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평화공존 5원칙’은 1955년 반둥(Bandung)회의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1997년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과 함께 중국-동남아관계의 기본원칙으로서 지역적으로 합의되는 등 가장 일관되게 견지되는 중국의 외교노선이다.⁵⁾ 그 주권원칙의 불신화(reification)는 “원자화된 국민국

5) 주권영토존중, 내정불간섭, 분쟁 평화해결, 무력사용위협 금지 등 1976년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은 중국의 ‘평화공존 5원칙’과 유사하지만, 전자와 달리 후자는 세력균형의 보완수단에 불과하다(Alagappa 2003).

가들 사이 강권정치의 세계”라는 지극히 조야한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반영한다(Deng 1999: 51). 그러나 그 형식적 양자주의는 ‘전쟁과 혁명의 시대’가 ‘평화와 발전의 시대’로 이행한다는 1980년대 덩샤오핑의 새로운 세계관에 따라 점차 실질적 양자주의로 진전한다. 경제발전을 위한 ‘주변 안정’이 새로운 대외전략으로 제기됨에 따라 중국의 전략문화는 ‘홉스문화’의 ‘패도(霸道)’를 넘어 ‘로크문화’의 ‘법도(法道)’를 바탕으로 점차 ‘칸트문화’의 ‘왕도(王道)’에 접근한다(Song and Chan 2000: 24-25). 그러한 경로의 변경에도 일정한 경계가 엄존하는바, 대외적으로 1979년 베트남침공과 대내적으로 1989년 천안문사태는 중국 전략문화의 한계를 상징하는 동전의 양면이다.

2. 동남아 양자주의

동남아 역내 각국의 상호관계는 탈식민화 이후 지속적 유동성을 드러내는바, 간헐적 일방주의적 행태가 양자주의적 외교를 교란한다. 사실 탈식민화 이후 정상적 양자관계가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는 1967년 이후 ASEAN 창설 5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정도에 불과하다(<표 3>). 따라서 동남아의 역내 국제관계에 있어서 주권체제의 제도화는 양자주의적 접근과 다자주의적 접근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한 주권원칙의 사회화를 의미한다. 유럽이 1648년 웨스팔리아(Westphalia)조약을 통하여 일방주의적 ‘홉스문화’를 탈피한 이후 20세기까지 3세기 이상이 소요되는 양자주의적 ‘로크문화’의 사회화를 기반으로 다자주의적 ‘칸트문화’에 진입하고 있는 반면, 동남아는 그 10분의 1에도 미달하는 기간에 ‘홉스문화’를 극복하고 ‘로크문화’와 ‘칸트문화’로 이행해야 하는 ‘이중전환’의 역사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 자본주의권의 실질적 양자주의는 냉전체제, 월남전쟁, 캄보디아사태 등에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본주의권의 정치적 구심력을 통하여 견인되고, 캄보디아사태의 종결과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라 사회주의권으로 확산된다. 그러나 실질적 양자주의에 더욱 크게 기여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수입대체에서 수출지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세계시장에 대한 편입이 가속되는 자본주의권 각국의 개방적 시장경제이다(Bowie and Unger 1997). ASEAN의 창립 이후 1980년대까지의 안보협력을 넘어 1990년대에 강화되는 경제협력은 바로 1980년대의 그와 같은 경제적 성과에 기초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 베트남과 라오스의 경제개혁은 폐쇄적 계획경제를 개방적 시장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세계시장에 대한 편입을 촉진하는 역사적 계기이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의 민족주의적 측면이 완화된에 따라 각국의 개방적 국제주의 시각이 확대되고, 실질적 양자주의 접근이 강화되는 것이다.

〈표 3〉 동남아 각국의 최초 수교 및 최근 복교

	태	필	인	말	싱	브	미	베	라
태국	-								
필리핀	49	-							
인도네시아	50	49	-						
말레이시아	57	59-64	57-65	-					
싱가포르	65	69	66	65	-				
브루나이	84	84	84	84	84	-			
미얀마	48	56	49	58	66	93	-		
베트남	76-91	76-91	55-91	73-91	73-91	92	75	-	
라오스	50-89	62-91	57-91	66-91	74-91	93	55	62-77	-
캄보디아	50-90	57-90	62-90	58-90	65-90	93	55	67-91	56-89

자료: Van der Kroef 1980; 王民同 1994; 王泰平 1999; 馬晋强 2000; 각국 외교부 웹사이트.

사회주의권의 경우 베트남은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1975년까지 역내 각국에 대한 공식적 외교관계의 수립이 지연되고, 그 이후에도 캄보디아 사태로 인하여 실질적 양자관계의 발전이 부진하게 된다. 베트남과 ‘특수 관계’에 있는 라오스도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사태가 종결되는 1990년대에 자본주의권 각국에 대한 실질적 양자관계의 진전이 가능하게 된다. 자본주의권 각국에 대한 캄보디아의 외교관계도 1991년 평화협정과 1993년 연립정부 출범 이후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따라서 자본주의권에서는 최초로 1955년 사회주의권의 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야 실질적 양자주의가 정착된다. 예컨대 1991년 항공운송, 경제과학기술, 투자보장, 산림, 1994년 관광, 문화교육, 1995년 무역, 이종과세, 2001년 해상운송, 2003년 커피수출, 어업, 비자면제, 보상무역, 석유가스, 대륙붕, 동반관계 등에 관한 양국협정이 체결된다. 따라서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을 막론하고 동남아 역내 국제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양자주의의 사회화와 제도화가 가속되는 것은 냉전체제의 해체와 캄보디아의 평화 이후인 것이다.

3. 중국-동남아관계

중국과 동남아의 공식적 외교관계는 1950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교에서 개시된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적 양자관계도 안정적 제도화에는 실패하며, 일방주의적 단교와 복교의 부침이 거듭된다. 예컨대 베트남은 1973년 이후 친소정책, 미얀마는 1967년 전후 화교탄압, 인도네시아는 1965년 이후 반공정책으로 인하여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된다. 따라서 외교적 양자주의가 안정적으로 개시되는 것은 미중화해와 베트남중전을 계기로 성사되는 1970년대 중반 말레이시아(1974년), 태국(1975년), 필리핀(1975년)과 중국의 공식수교 이후이다. 1978년 베트남의

〈표 4〉 동남아 각국의 대중관계

국가	독립	수교	단교	복교	경조약
미얀마	1948	1950	1967	1971	1960
베트남	1945-54	1950	1979	1991	1999-2000
라오스	1945-54	1961	1979	1989	1993
캄보디아	1953	1958	1979	1993	
인도네시아	1945-49	1950	1967	1990	
말레이시아	1957	1974			
태국		1975			
필리핀	1946	1975			
싱가포르	1965	1990			
브루나이	1984	1991			

자료: 王民同 1994; 王泰平 1999; 馬晉強 2000; 陳喬之 2001; 기타 각국 외교부 웹사이트.

캄보디아침공과 1979년 중국의 베트남침공 이후 베트남에 대응하여 강화되는 ASEAN과 중국의 안보협력과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라 짐증하는 경제협력은 지역적 차원의 냉전종식을 촉진한다. 1989년 세계적 차원의 냉전종식 및 베트남의 캄보디아 철군 이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자본주의권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사회주의권에 대한 중국의 양자관계가 수교 또는 복교를 통하여 정상화됨에 따라 실질적 양자주의는 1990년대에 정착되는 것이다(〈표 4〉).

따라서 동남아 역내에서 실질적 양자주의가 지속적으로 진전되는 경우는 자본주의권 내부의 경우뿐이라 할 수 있는바, 태국을 비롯하여 필리핀(1946년), 인도네시아(1949년), 말레이시아(1957년), 싱가포르(1965년), 브루나이(1984년) 등은 그 탈식민화의 진전에 따라 상호 외교관계가 발전한다. 그 경우에도 1963년 말레이시아연방의 결성 및 사바(Sabah) 영유권에 관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분쟁, 1965년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연방 이탈, 1990년대 남사군도(Spratley) 영유권에 관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중국의 분쟁 등 국경문제가 간헐적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967년 ASEAN 창설 이후 장기적,

점진적,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자본주의권의 양자주의에 대한 경험의 축적과 학습의 심화는 1990년대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을 관통하는 양자주의의 지역적 제도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실질적 양자주의의 그러한 진전은 1980년대 동남아 공산당의 무장투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중단과 캄보디아문제에 관한 ASEAN과 중국의 협력강화에 기인한다. 화교의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1955년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협정을 계기로 속인주의(*jus sanguinis*)에서 속지주의(*jus soli*)로 국적제도를 변경하는 중국의 화교정책은 동남아 각국 ‘화교사회’의 중국 ‘뿌리찾기落葉歸根’가 ‘화인사회’의 현지 ‘뿌리뻗기落地生根’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한다(陳喬之 2001: 38-43). 독립 이후 ‘화교사회’ 차별정책의 강화와 현지출생 화교세대의 급증도 ‘화인사회’의 현지화를 촉진한다. ‘화교사회’에 근거하는 각국 공산당의 무장투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을 위한 화교자본의 경제적 필요성과 캄보디아를 위한 연합전선의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1980년대 전반 전면적으로 중단된다(Lee 2000: 595-603; Yee and Storey 2002). 그에 따라 1980년대 후반 태국(1985년), 말레이시아(1989년), 미얀마(1989년)의 공산당이 모두 자진 해체된다(<표 2>).

V. 시장의 다자주의

세계적 차원이든 지역적 차원이든 국제질서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자주의는 “3개 이상 국가들의 집단에서 국가정책을 조정하는 관행”이라는 양적, 절차적 조건 이외에도 “3개 이상 국가들의 집단에서 그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일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정책을 조정하는 관행”이라는 질적, 규범적 조건의 충족을 요구한다(Ruggie 1993: 6-7). 전자는 형식적 다자주의로서 진정한 다자주의의 필요

조건을 구성하며, 후자는 실질적 다자주의로서 진정한 다자주의의 충분 조건을 제공한다. 1개 국가의 강권적 요구가 관철되는 일방주의나 2개 국가 사이의 외교적 협상에 의존하는 양자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진정한 다자주의는 3개 이상 국가 사이의 규범적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방주의는 주권원칙을 부정하는 패권주의적 국제제도인 반면, 양자주의는 주권원칙을 과장하는 특수주의적 국제제도이다. 그러나 다자주의는 내면화의 계기나 사회화의 수준이 강권(위협), 이익(교환), 가치(통합)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원칙에 기초하면서도 국가주권에 대한 평등한 상호제약을 수용하는 보편주의적 국제제도이다.

중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도 국가주권과 국가이익에 대한 근시적 시각을 고수함으로써 거의 모든 지역의제에 관한 다자주의적 조정을 거부함으로써 “지역주의-다자주의에 대한 일방주의-양자주의의 압승”을 기록한다(Roy 1998: 179).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제발전과 문화변동은 중국의 정체성과 이익에 대한 거시적 시각을 고무하는바, 전자는 점차 ‘책임대국’으로 표상되고, 후자는 점차 ‘평화중흥(和平崛起)’으로 집약된다. 그에 따라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접근에 있어서 다자주의적 행태가 급증하는 것이다. 동남아의 경우에도 ‘상상적 민족공동체’를 넘어 ‘상상적 지역공동체’로서 집단적 정체성의 형성과 공동이익의 표출이 진전된다. 그에 따라 ‘중국위협론’에 따른 봉쇄전략(containment)을 넘어 ‘중국기회론’에 의한 개입전략(engagement)에 대한 지역적 합의가 형성된다(Johnston and Ross 1999). 그와 같이 배제와 견제에서 포섭과 견인으로 전환되는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가 실질적 다자주의의 확대와 심화를 추동하는 것이다.

1. 중국의 다자주의

중국의 대외정책은 계속성과 가변성을 동시에 드러내는데, “중국의 행동은 국가이익과 국가목표에 대한 정의에 따라 결정되며, 후자는 다시 국가정체성에 대한 관념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정체성에 대한 중국의 모색은 아편전쟁 이후 국제적 역할의 극심한 유동성을 초래한다. 국가이익에 대한 중국적 관념의 실질적 내용은 일원적이며 정태적이지 아니라 경합적이며 역동적이다”(Deng 1999: 63-64). 중국의 정체성과 이익은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江澤民 등 ‘3세대’ 지도부의 교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되며, 각 지도부의 시각은 ‘민주집중’의 지극히 위계적인 정책과정으로 인하여 객관적 조건에 대한 인식과 주체적 실천을 위한 전략을 주도한다. 그러나 정치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이 약화되고 국가-사회관계의 일원주의적 성격이 완화되는 정치변동에 따라 지도부가 사회적 담론을 반영하는 현상도 점진적으로 강화된다. 예컨대 세계화에 대한 장쩌민의 적극적인 시각은 중국 ‘시민사회’의 영향을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王逸舟 2000).

1960년대까지 중국은 ‘체제외적 국가’로서 혁명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1970년대에는 UN복귀와 ‘반소친미’에 따라 그러한 정체성이 약화되며, 1980년대 이후에는 ‘체제내적 책임대국’의 정체성으로 전환한다(秦亞青 2003).⁶⁾ 1990년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점증하는 자유주의적 시각은 상호의존과 ‘공동안보’를 국가적 의제로 제기함으로써 다자주의에 대한 적극적 시각의 확산에 기여한다(Deng 1999: 53-57). ‘종합국력’을 통한 ‘평화중흥和平崛起’이라는 민족주의적 목적이 세계화에 대한 중국

6) 1999년 현재 중국이 가입한 다자주의적 국제협약은 모두 220개로서, ‘체제외적’ 시기 30년(1949~79) 동안에는 34개에 불과한 반면 ‘체제내적’ 시기 20년(1980~1999) 동안에는 185개로 급증한다(秦亞青 2003: 11).

사회의 ‘위협론’ 대신 ‘기회론’을 확산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협론’ 대신 ‘기회론’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주의적 수단이 ‘세계적 민족주의(global nationalism)’를 촉진한다(Moore 2000). 그에 따라 경제적 세계화가 상호의존, 상호이익, ‘공동우승’을 위한 경제협력을 요청하고, 정치적 다극화가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한 신뢰, 호혜, 평등의 안보협력을 요청하는 새로운 국제정세가 부각된다(Deng 1999: 64-65; 鄭必堅 2003; 胡錦濤 2004).

영합적(zero-sum) ‘상대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와 달리 자유주의는 정합적(positive-sum) ‘절대이익’ 및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을 교정하는 효과를 강조한다(王緝思 1995: 196-99). 영토, 주권, 군사, 정치 등 ‘전통적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환경, 문화 등 ‘비전통적 안보’를 포괄하는 ‘종합안보’의 상호의존적 본질이 요구하는 ‘상호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 등 각종 다자주의적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신안보관’이 제출된다(王逸舟 1999; 中國外交部 2002). 전통적 주권개념을 희석하는 경제적 세계화의 역동적 현실도 부각되는바,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절정이던 1998년 중반에도 장쩌민은 세계화의 필연성을 역설한다. “경제적 세계화는 세계경제 발전의 필연적 추세로서 아무도 회피할 수 없으며 누구나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王逸舟 2000).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상호의존적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인식됨으로써 동아시아의 다자주의적 경제협력에 대한 시각이 적극적으로 전환되는바, 외교노선에 있어서도 현실주의적 ‘독립자주’보다 자유주의적 ‘공동발전’의 측면이 강조된다(龐中英 2001; 葉白成 2004).

2. 동남아 다자주의

1980년대 종반 냉전체제의 해체와 캄보디아의 평화는 ASEAN과 베트남의 갈등으로 인한 동남아의 분열적 정체성이 통합적 정체성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돌파’의 계기이다(Acharya 2000: 133). 새로운 지역적 정체성은 바로 ASEAN의 역사적 진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닉슨독트린’에 따른 미국의 철수계획과 영국군대의 전격철수가 초래하는 권력공백에 대처하기 위하여 1967년에 창립되는 ASEAN은 지역협력의 효과적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당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 지역협력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까지는 베트남전쟁과 그 후속상태－베트남의 캄보디아침공, 중국의 베트남침공－에 대응하는 안보협력이 강조된다(Lee 2000: 329-341; Acharya 2000: 105-123; Acharya 2001: 80-101). ASEAN은 1960년대 전반을 풍미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일방주의적 행태를 자제함으로써 양자주의적 외교관계의 정착에 기여하고, 1980년대에 베트남의 일방주의적 행태를 견제함으로써 다자주의적 상호협력의 성과를 축적한다.

그에 따라 ASEAN 다자협력의 기능적 내포가 점차 안보협력에서 경제협력으로 심화되는바, 1992년 지역안보포럼(ARF) 및 자유무역지대(AFTA) 창설계획에 합의한다. ASEAN 다자협력의 지리적 외연도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 및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 등 동남아 전역으로 확대된다. ‘ASEAN5’의 ‘상상’이 30년 만에 ‘ASEAN10’의 현실로 구현되는 것이다. 1994년 출범하는 ASEAN지역포럼(ARF)은 안보협력의 공식적 절차와 조직을 중시하는 유럽모델과 달리 절차의 비공식성과 조직의 최소주의를 선호하며, 안보협력의 합리적 대안으로서 신뢰구축, 예방외교, 갈등해결의 3단계를 제시한다(陸建人 1999: 172-210; Acharya 2000: 146-148). 주권원칙에 충실한 ‘연성적’ 제도주의와 점진주의는 전통적·

비전통적 ‘종합안보’의 다자주의적 안보협력에 대한 역내국가 참여의 확대와 역외국가 참여의 견인에 기여한다. 그러나 ARF가 형식적 다자주의의 ‘휴게실(talkshop)’에서 실질적 다자주의의 ‘작업실(workshop)’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권원칙의 상대적 유연성을 수용하는 ‘안보공동체’가 긴요하다(Alagappa 2003; Acharya 2001: 203-209).

경제협력의 경우 자본주의권의 다자협력은 1992년 자유무역지대(AFTA) 창설계획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태국이 추가된 사회주의권의 다자협력은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주도의 광역메콩지역(GMS) 개발계획 및 1995년 ASEAN 주도의 메콩하류유역(MRB)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전개된다(MRC 1995; ADB 2001). 자원환경, 수력자원, 교통운수, 정보통신, 통상교역, 인간자원, 문화관광 등에 대한 다자협력을 통하여 지역통합에 기여한다는 목표가 설정된다. 메콩의 수원국가로서 중국의 윈난성雲南省 정부도 참여함으로써 국지적 지역협력과 광역적 지역협력의 유기적 관계가 실증된다(許聖達 外 1998: 359-363). GMS에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중국 등 6개국이 참여하고, MRB에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4개국이 참여한다. 국경개방과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4개국은 2001년 국경관리협정을 체결하고, ‘동서회랑’과 ‘남북회랑’의 교통개발 등 지역협력의 하부구조 구축사업도 전개된다.

3. 중국-동남아관계

집단안보 대신 양자동맹에 기초한 현실주의적 세력균형이 지역안보의 중추적 기제로서 작용하는 동아시아의 정치지형에서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을 위한 중국과 동남아 사이 지역적 다자주의의 진전은 지극히 획기적인 현상이다. 아직 전통적 세력균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다자주의적 접근은 과거의 양자외교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다양한 상호제약에 대한 수용을 지향하는 제도적 진전이므로 일시적 실험으로만 속단될 수 없는 역사적 의의를 함축한다. 동남아의 지역적 다자주의는 중국부상의 정치적 및 경제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적 전략수단이며, 중국의 지역적 다자주의는 ‘중국위협론’을 제동하고 새로운 ‘대국외교’를 추동하기 위한 공격적 전략수단이다. 동남아와 중국의 그와 같은 상호이익이 다자주의적 상호협력에 수반되는 상호제약에 대한 자율적 수용을 고무할 것이다(龐中英 2001). 따라서 캄보디아문제의 해결이 임박한 1988년 인도차이나를 “전장에서 시장으로” 전환하자는 태국총리 차이(Chatchai Choonhavan)의 제안은 동아시아 전역에도 타당하게 된다(Acharya 2000: 121-123; 唐希中外 2003: 251). 일방주의적 ‘전장’에서 다자주의적 ‘시장’으로 전환하는 경로가 양자주의를 통하여 개설되는 것이다.

베트남을 견제하기 위한 상호협력(1979~1989)과 캄보디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상호협력(1989~1993)은 동남아와 중국의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획기적 계기이다. 캄보디아문제는 1989년 베트남 철군, 1990년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991년 파리협정, 1992년 UN감시선거, 1993년 연립정부출범으로 종결된다.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등 ASEAN 각국과 중국은 정치적 및 재정적 지원은 물론 군사요원까지 파견한다(王泰平 1999: 195-212; Acharya 2001: 80-101). 그러한 경험은 지역안보를 위한 다자주의적 기제의 점진적 발전을 추동한다(Wang 1999: 84-91). 1991년 ASEAN 외교장관회의 협의대상, 1994년 ARF 대화상대, 1996년 ASEAN 각료회의 대화상대, 1997년 ASEAN+1(중국) 및 ASEAN+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 2002년 비전통안보협력선언, 2003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 가입 등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영토문제에 관한 양자협상 및 남중국해에 관한 ‘분쟁유보, 공동개발’ 원칙은 확고하게 견지된다.⁷⁾

사실 식민체제와 냉전체제의 강권적 일방주의에 대한 ‘반사적’ 민족주의에 따라 국가주권에 대한 집착이 강화되는 동남아와 중국은 안보부문의 다자협력에 비하여 경제부문의 다자협력에 더욱 적극적이다. 중국에 대한 ASEAN의 수출 및 수입은 2003년에도 전년대비 각각 51.7% 및 31.2% 증가하는 등 ASEAN은 이미 중국의 5대 수출시장 및 4대 수입시장이다. 2002년의 포괄경제협력기본협정은 중국과 ASEAN의 자유무역지대(ACFTA)를 추진하는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선발 6개국은 2010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후발 4개국은 2015년이 최종목표로 설정된다. 그러한 다자협력은 농업, 정보통신기술, 인력자원개발, 메콩유역개발(MRB), 상호투자 등 5개 우선 부문과 SARS 예방통제,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다양한 ‘기능부문’으로 확대된다.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의 국경지대에 확산되는 변경 무역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전장’은 이미 ‘시장’이다.

VI. 지속과 변화

국제관계에 대한 접근시각에 있어서 문화적으로는 ‘흙스문화’에서 ‘칸트문화’까지, 제도적으로는 일방주의에서 다자주의까지, 이론적으로는 현실주의에서 자유주의까지 광범한 스펙트럼이 드러나는 동남아와 중국의 상호관계는 일정한 계속성과 다양한 가변성을 내포한다. 그와 같이 다양한 동남아와 중국의 동향에 비추어 현실주의적 주장과는 달리 동남아와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 국제관계의 ‘무정부성’이나 국가역량의 배분구

7) 남중국해의 영유권분쟁과 관련하여 2002년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5개국은 ‘남중국해행동수칙’에 합의하고, 2005년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3개국은 ‘남중국해공동개발’에 합의한다.

조에서 합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동남아와 중국의 상호관계는 물론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에 대한 전망은 일방주의적 ‘홉스 문화’에서 양자주의적 ‘로크문화’와 다자주의적 ‘칸트문화’로 이행하는 급속한 문화변동에 대한 경험에서 도출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미래는 ‘유럽의 19세기’나 ‘아시아의 전통’이 아닌 최근의 실천적 경험으로부터 부상할 것인바, 사태는 여전히 유동적이다.⁸⁾ 그 점에 있어서 군사, 기술, 경제 등 물질적 차원의 구조적 조건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합리주의적 접근시각은 이념, 문화, 가치 등 관념적 차원의 주체적 선택에 주목하는 구성주의적 접근시각에 충분히 포섭된다.

일방주의, 양자주의, 다자주의가 착종하는 제도적 중층성은 중국-동남아 관계의 계속성을 표현하며, 각국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전략적 역동성은 중국-동남아 관계의 가변성을 표현한다(<표 5>). 일방주의를 탈피하여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중국-동남아 관계의 동향은 일방주의를 향한 과거지향적 변화가 아니라 다자주의를 향한 미래지향적 변화를 예고한다. 그러나 동남아와 중국 사이 각종 다자협력의 발전은 ‘평화공존 5원칙’과 ‘ASEAN 방식’의 주권주의적 공통성에 기인하는

<표 5> 중국과 동남아의 상호관계

		다자주의			
		양자주의			
일방주의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냉전체제	베트남전쟁	미중화해	중국개방	냉전종식	경제위기

8)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동아시아 미래질서는 미국 주도적 세력균형이나 중국 중심적 패권체제이다. “유럽의 과거가 아시아의 미래일 것이지만, 아시아의 과거가 더욱 아시아의 미래일 것이다. 아시아의 선택은 갈등이 수반되는 세력균형이나 패권을 수용하는 평화보장이다”(Kissinger 1994: 826; Huntington 1996: 238).

것이므로(Wang 1999: 91-93), 제도적 다자주의의 기초로서 외교적 양자주의가 계속 견지될 것이다. 다자주의가 패권주의의 일방주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동원되는 현실에 대한 중국의 비판은 역으로 국가이익이 요구하는 경우 중국도 언제든지 일방주의에 의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의 경우 여전히 형식적 다자주의가 실질적 다자주의를 압도하며, 다자주의는 양자주의적 ‘대국외교’의 보완수단일 뿐이다. 동남아 경우에도 ‘미안마문제’의 교착상태가 반증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 다자주의에 대한 ‘ASEAN 방식’의 제약이 여전히 심각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거시적 전망은 동남아 각국 및 중국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동이라는 국가적 변수는 물론 지역적 및 세계적 변수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체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동남아 상호관계나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미래는 세계적 세력균형의 구조적 동향—일극화 또는 다극화—에 대응하여 각국의 분열적 정체성이 국가(‘위’)로부터의 하향적 운동과 사회(‘밑’)로부터의 상향적 운동이 세계(‘밖’)로부터의 내향적 운동에 대한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떠한 통합적 정체성으로 구성되는가에 달려 있다(Kim and Dittmer 1993). 정치체제, 인권문제, 영토분쟁, 종족갈등, 종교갈등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일방주의적 행동 가능성이 상존한다. 지역패권의 잠재적 역량이 지대한 중국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민족주의적 목적에 따라 수용되는 다자주의적 국제제도의 내면화가 장기적으로 다자주의적 ‘칸트문화’의 사회화를 향한 문화변동을 촉진할 수도 있다(Christensen 1999).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에 대한 전망은 이론적 시각에 따라 첨예하게 대조적이다. 현실주의적 시각은 민족주의의 강화에 따라 가열되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을 예상하고 전통적 세력균형을 그 전략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자유주의적 시각은 지역주

의의 확산에 따라 심화되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상호의존을 예측하고 다자주의적 지역통합을 그 전략적 기획으로 제출한다. 그와 같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론적 시각은 모두 구조적 조건에 대한 물질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에 편향되어 행위주체, 즉 국가의 동질성과 계속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식민체제의 붕괴 이후 냉전체제의 고착, 균열, 해체 등 각 단계에 따라 중국과 동남아 각국은 정체성과 이익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과시한다. 따라서 각국의 경제적 자유화와 정치적 민주화가 수반하는 사회적 자율성과 문화적 다원성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자유화와 정치적 민주화는 상호의존과 다자주의를 촉진함으로써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지역질서의 사회화와 제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Deng 2000: 59-61).

탈식민화 이후 국가형성 초기에 냉전체제와 ‘상상적 민족공동체’는 지역주의의 진전을 저해한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균열과 해체에 따라 자본주의권의 보수적 민족주의가 주도하는 지역주의가 자율적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주의권의 급진적 민족주의를 지역주의에 포섭한다. 양자주의적 국가형성이 다자주의적 지역형성을 추동하는 것이다. 1967년 ASEAN의 출범 직전 한 미국대사는 동남아를 “공동체의식, 공유가치, 공동제도 등이 전무한 지역”으로 규정한다. 그 후 20년의 경과 이전 한 미국 학자는 “동남아라는 지역개념은 생동하는 실체”임을 확인한다(Acharya 2000: 163-69). 민족이나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지역이나 지역주의도 상상되고 기획되고 구성되는 것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동남아와 중국의 ‘지역’에 대한 상상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된다. 동남아와 중국의 관계는 그러한 거시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가 발전하는 방향—수직적·패권적 또는 수평적·다원적—은 ‘상상적 지역공동체’로서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를 계도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 일방주의, 양자주의, 다자주의, 지속, 변화.

참고문헌

- Acharya, Amitav. 2000. *The Quest for Ident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Constructing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 ADB(Asia Development Bank). 2001. "Looking Ahead: Continue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 Alagappa, Muthiah. 2003. "Constructing Security Order in Asia." In Alagappa(ed.). *Asian Security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owie, Alasdair and Danny Unger. 1997. *The Politics of Open Econo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zezinski, Zbigniew and John Mearsheimer. 2005. "Clash of Titans." *Foreign Policy*, January-February.
- Chai-Anan Samudavanija. 1991. "The Three-Dimensional State." In James Manor(ed.). *Rethinking Third World Politics*. London: Routledge.
- Chen Jian. 2001. *Mao's China and the Cold Wa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Christensen, Thomas J. 1999. "Pride, Pressure and Politics." In Yong Deng and Fei-Ling Wang(eds.). *In the Eyes of the Dragon*. Lanham: Rowman & Littlefield.

- Deng, Yong. 1999. "Conception of National Interests." In Yong Deng and Fei-Ling Wang(eds.). *In the Eyes of the Dragon*. Lanham: Rowman & Littlefield.
- _____. 2000. "Escaping the Periphery." In Weixing Hu, Gerald Chan and Daojiong Zha(eds.).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Lanham: Univeristy Press of America.
- Dittmer, Lowell and Samuel S. Kim(eds.). 1993. *China's Quest for National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 P.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 Johnston, Alastair L. and Robert S. Ross(eds.). 1999. *Engaging China*. London: Routledge.
- Katzenstein, Peter J. 1997. "Asian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eds.). *Network Pow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im, Samuel S. and Lowell Dittmer. 1993. "Whither China's Quest for National Identity?" In Dittmer and Kim(eds.). *China's Quest for National Ident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issinger, Henry A. 1994.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 Lee Kuan Yew. 2000. *From Third World to First*. New York: HarperCollins.
- Mearsheimer, John J.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Moore, Thomas G. 2000. "China and Globalization." In Samuel S. Kim(ed.). *East Asia and Globalization*. Lanham: Rowman & Littlefield.
- MRC(Mekong River Commission). 1995. "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 the Mekong River Basin."

- Nye, Joseph S. 2005. "China's 'Peaceful' Rise Brings Promise to Region and Its People." *Jakarta Post*, March 1.
- Oksenberg, Michel, and Elizabeth Economy. 1999. "Introduction." In Elizabeth Economy and Michel Oksenberg (eds.). *China Joins the World*. Washington, D.C.: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Roy, Denny. 1996. "The 'China Threat' Issue." *Asian Survey* 36(8).
- _____. 1998. *China's Foreign Relations*. Lanham: Rowan & Littlefield.
- Ruggie, John G.(ed.) 1993. *Multilateralism Matt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ong, Xinning and Gerald Chan. 2000.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China." In Weixing Hu, Gerald Chan and Daojiong Zha(eds.).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Lanham: Univeristy Press of America.
- Van der Kroef, Justus M. 1980. *Communism in Southeast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Van Ness, Peter. 1970. *Revolution and Chinese Foreign Poli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ang, Jianwei. 1999. "Managing Conflict." In Yong Deng and Fei-Ling Wang(eds.). *In the Eyes of the Dragon*. Lanham: Rowman & Littlefield.
- Whiting, Allen S. 1997. "ASEAN Eyes China." *Asian Survey* 37(4).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ee, Herbert and Ian Storey(eds.). 2002. *The China Threat*. London: RoutledgeCurzon.

鄧小平. 1993. 『鄧小平文選』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 陸建人 編. 1999. 『東盟的今天與明天』.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 馬晋強 編. 2000. 『當代東南亞國際關係』.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毛澤東. 1991. 『毛澤東選集』, 四卷. 北京: 人民出版社.
- 許聖達·馬勇·王士泉. 1998. 『走向21世紀的東南亞與中國』. 昆明: 雲南大學出版社.
- 葉自成. 2004. “在新形勢下對鄧小平外交思想的繼承, 發展和思考.” 『世界經濟與政治』11.
- 王民同 編. 1994. 『東南亞史綱』. 昆明: 雲南大學出版社.
- 王逸舟. 1999. 『全球化時代的國際安全』.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_____. 2000. “市民社會與中國外交.” 『中國社會科學』3.
- _____. 2001. “中國與多變外交.” 『世界經濟與政治』10.
- 王正毅. 2003. “亞洲區域化: 從理性主義走向社會建構主義?” 『世界經濟與政治』5.
- 王緝思 編. 1995. 『文明與國際政治』.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王泰平 編. 1999. 『新中國外交50年』. 北京: 北京出版社.
- 章百家. 2005. “‘抗美援朝’與‘援越抗美’: 中國如何應對朝鮮戰爭和越南戰爭.” 『世界經濟與政治』3.
- 張小明. 1998. “冷戰時期新中國的四次對外戰略抉擇.” 劉山·薛君度 編. 『中國外交新論』.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鄭必堅. 2003. “中國和平崛起新道路和亞洲的未來.” 『學習時報』12月25日.
- 中國外交部. 2002. “中國關於新安全觀的立場文件.” 7月31日.
- 陳喬之. 2001. 『冷戰後東盟國家對華政策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秦亞青. 2003. “國家身分, 戰略文化和安全利益.” 『世界經濟與政治』1.

秦亞青·米尔斯海默. 2003. “大國是否必然走向衝突.” 『環球時報』11月28日.

唐希中·劉少華·陳本紅. 2003. 『中國與周邊國家關係』.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龐中英. 2001. “中國的亞洲戰略.” 『世界經濟與政治』10.

胡錦濤. 2004. “中國的發展 亞洲的機遇.” 『中國改革論壇』4月24日.

Abstract

From Battlefield to Marketplace: Changes and Continuity in China-Asean Relations

Sa-Myung Par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interactive relationships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since the 1950s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emphasizing the role of ideational and cultural factors over the role of material and structural factors stressed by realism and liberalism. National identity and interest are constructed through social interactions, but not dictated by structural imperatives. From the 1950s through the 1970s, the radical identities and interests of China and Southeast Asian states as enemies in the ‘Hobbesian culture’ followed the disintegration of colonialism, leading to the rapid spread of coercive unilateralism. In the 1980s, however, the pragmatic identities and interests of China and Southeast Asian states as rivals in the ‘Lockian culture’ promoted their bilateral cooperation, laying the basis for the full development of diplomatic bilateralism in the 1990s. As a result, the 1990s witnessed the gradual growth of multilateral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making possible the gradual construction of a new regional identity and interest as friends in the ‘Kantian culture’. While

continuities are represented by the complex cultural combination, changes are suggested by the dynamic cultural transition. Thus, the prospects for a multilateral order in East Asia will depend on the direction of ideational interaction along the wide ideational spectrum from the 'Hobbesian culture' of unilateralism through the 'Lockian culture' of bilateralism toward the 'Kantian culture' of multilateralism.

Key words : unilateralism, bilateralism, multilateralism, continuity, change.